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보도일시 2007.2.23일(금) 배포시

생산일	2007년 2월 23일	생산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담당과장	김철주 (T:2150-2110)	담당자	신중범 (T:2150-2111) 박주언 (T:2150-2115)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2007. 2

재 정 경 제 부

목 차

I.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및 성과	1
1. 안정적이고 자생적인 경제회복 추진	1
(BOX 1) 성장률 국제비교	
(BOX 2) 국민소득 2만불의 의미	
2.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	7
3.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9
4. 미래에의 대비 강화	11
II.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	12
1. 세계화·정보화 추세	12
2.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13
3. 양극화 현상의 진전	14
III. 향후 대응방향	15

<붙임> 주요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성과

I.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및 성과

1. 안정적이고 자생적인 경제회복 추진

정책 방향

- ① 사후에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거시경제를 운용

* 6공화국 : 12.12조치(증시부양책), 4.4 대책(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문민정부 : 신경제 100일 계획
국민의 정부 : 신용카드 규제완화 등 소비진작

- 신용카드 거품의 후유증으로 민간소비가 사상 처음 2년 연속(03~04년) 감소하는 극심한 내수 침체하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
- 그러나, 무리하지 않은 합리적 경기진작 수단은 최대한 동원하여 경기안정을 도모(재정조기집행, 공기업투자확대, 민자유치제도 도입 등)
- 그 결과, 과거 정부에서 나타났던 “경제위기론 → 경기부양 → 경제 불안정”의 악순환을 차단

- ② 조기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을 확대·보완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확충

* 기존의 대외 부분에 금융·원자재·부동산·노동 부분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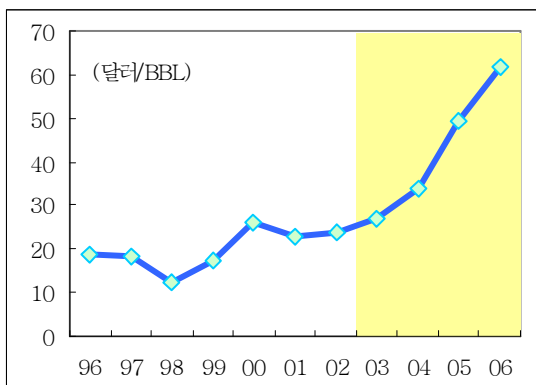
- 경제위기 징후에 대응한 업무수행 및 조치계획을 담은 “경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을 제작·활용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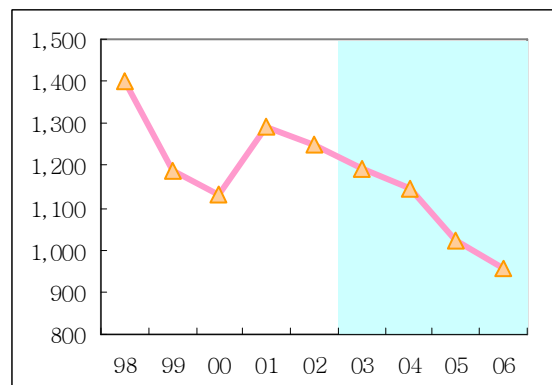
① 유가 급등과 환율 절상, 가계부채 조정의 진행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딛고 잠재 수준의 정상성장궤도로 복귀

- 2003~06년중 Dubai유가는 연평균 27%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7% 절상되어 참여정부 기간중 지속적인 경제부담요인으로 작용

Dubai 유가 추이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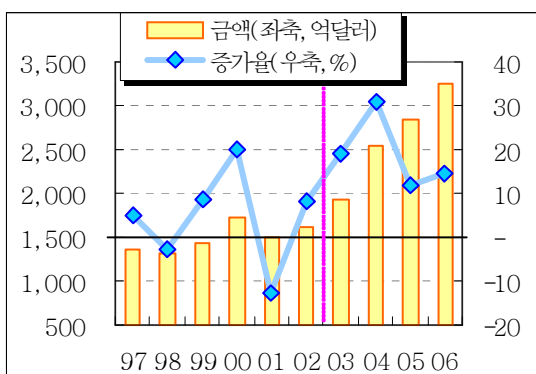


- 그러나, 수출은 세계경제 호조와 우리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03년 이후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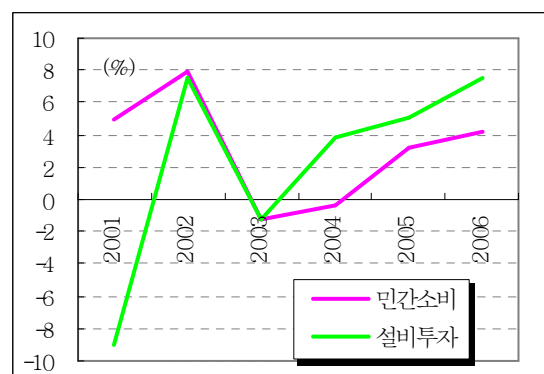
* 통관수출은 참여정부 4년간(03~06년) 연평균 19% 증가

- 한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03~04년중의 조정과정을 거쳐 05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복귀

통관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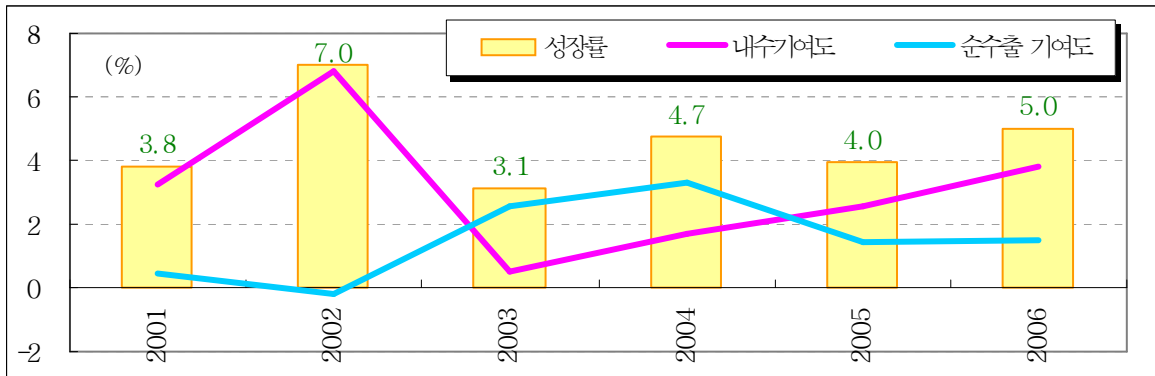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추이



- 그 결과 06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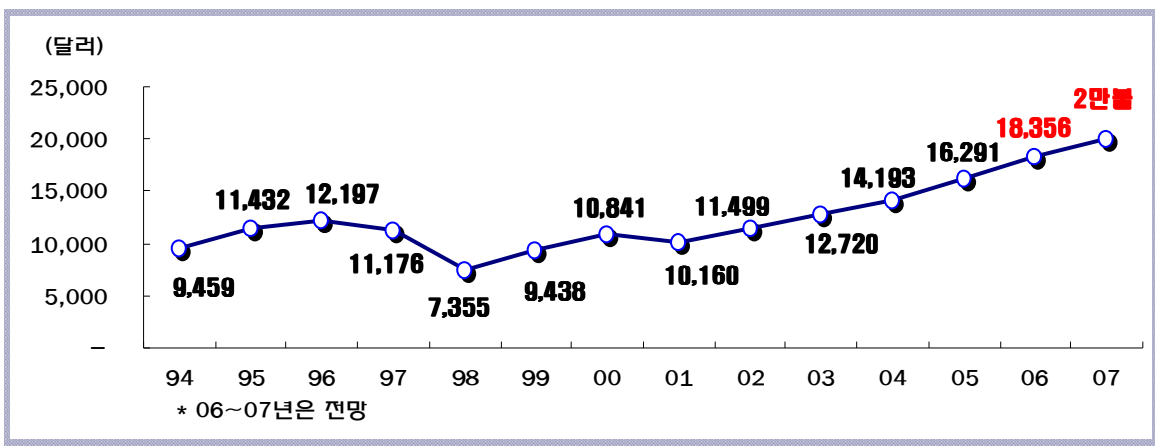
성장률과 내수·순수출 기여도 추이



② 한편, 우리 경제는 이르면 07년중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망

- 1995년 1만불 진입 직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2년만에 魔의 1만불 시대에서 탈출하여 선진국 문턱에 도달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및 전망



③ 시장은 이러한 경제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참여정부 기간중 종합주가지수는 2배 이상 상승하였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도 상승

* 종합주가지수 : (03.2말)575.4 → (07.2.22)1,465.4
 국가신용등급 : S&P A- → A, Fitch : A → A+

④ 다만,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다소 부진

①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

- 내수 부진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 총생산(GDP)과 실질총소득(GNI)간 괴리가 지속

* 실질 GNI 성장률(%) : ('03)1.9→('04)3.9→('05)0.5→('06.1/4~3/4)1.9

- 공급과잉, 낮은 생산성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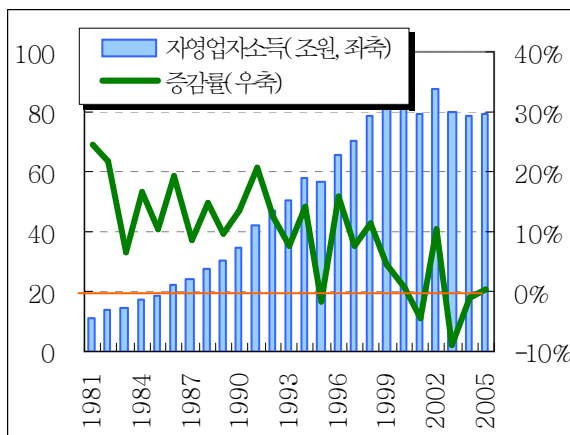
② '04년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연간 30만개 수준 증가하여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

- IT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 공장 해외이전 등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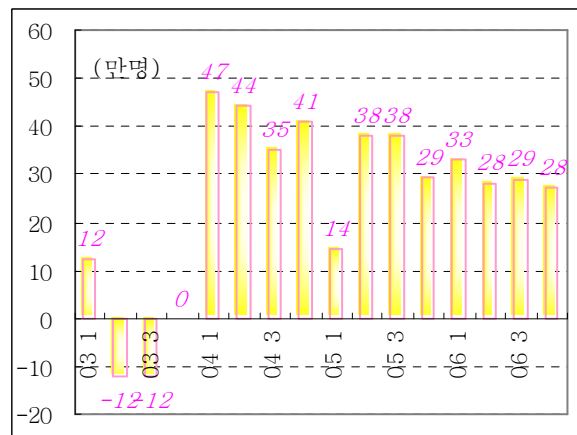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증감(만명) : (03년) △3.6 → (04년) 8.5 → (05년) △5.6 → (06년) △6.7

- 유가상승 및 환율절상의 영향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소극적 자세

자영업자 소득 추이



일자리 창출(전년동기대비) 규모



< Box 1 : 성장을 국제비교 >

① 참여정부 기간(2003~06년)중 실질 GDP는 연평균 4.2% 성장

- 과거 70~80년대의 7~8%, 90년대의 6% 내외 성장에 비해 낮아진 것이나, 경제발전 단계의 진전에 따른 성장세 둔화는 우리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경우에도 공통된 현상

주요국 연대별 경제성장률 추이 (%)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미	국	3.3	3.1	3.1	2.4
독	일	3.2	1.9	3.3	0.9
프	랑	3.7	2.2	1.7	2.0
일	본	5.2	3.7	1.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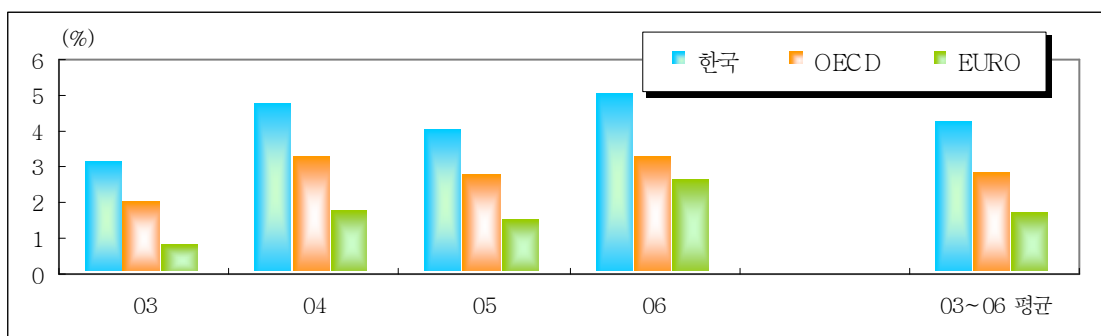
② 오히려, 주요 선진국의 1인당 GNI가 “1만불대 초반~후반”인 기간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평균(3.2%)보다 양호한 수준

주요 선진국의 1.3만불이상 → 1.7만불이하 달성기간중 성장률

	기 간	실질GDP 증가율
캐나다	1985~88	4.1
프랑스	1987~90	3.2
독일	1987~90	2.7
이태리	1987~90	2.9
일본	1986~87	3.4
영국	1988~90	2.6
미국	1981~85	3.2
평균	3.7년	3.2
한국	2003~06	4.2

- 한편, 05년 4% 성장은 OECD 7위 수준이며 06년 5.0% 성장은 OECD 최상위권

OECD 국가와의 성장률 비교



< Box 2 : 국민소득 2만불의 의미 >

① 일각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환율 덕을 본 것뿐이라는 견해를 제시

※ 2007년 원/달러 환율을 930원으로 전제할 경우 1만불에 재진입한 2000년 이후 07년까지 환율의 소득증가 기여율은 32% 수준

○ 그러나,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국제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개념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되지 않고는 원화 절상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도 큰 의미

※ 참여정부 기간중 경제 체질강화

①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 600억불 이상(03년 이후 4년 연속 두자리수 수출 증가, 세계 11번째 수출 3천억불 달성)

② 2002년말 대비 외환보유액 2배 이상 증가
(02년말 1,214억불 → 06년말 2,390억불)

③ 기업의 투명성·수익성 호조 등

○ 외국의 경우에도 1→2만불 과정에서 실질 성장률외에 환율이나 GDP deflator 등 명목 요인이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

- 일본의 경우 6년만에 1만불에서 2만불에 진입(87년)했지만 환율 요인에 의한 소득 증가분이 55%를 차지

※ 우리나라의 경우 1만불시대 12년간 전체로는 환율 요인이 소득증가에 마이너스 요인(△32%)

○ 오히려, 실질 성장률은 일본·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1만불을 넘으면서 2~3%대로 둔화되었던 반면, 우리는 1만불을 달성 이후에도 평균 4%대 중반의 성장세 시현

②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그간의 꾸준한 구조조정과 경제·사회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 따른 결과

○ '국민소득 2만불'이 선진국의 충분조건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로 삼을 필요

2.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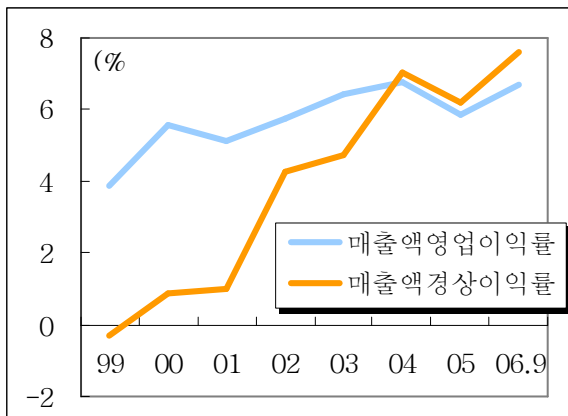
정책 방향

- ①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 구조조정 등 금융시스템 선진화 추진
 - * 장기국채 발행 등 자본시장 저변 확충, 자본시장통합법률 마련(06.12월 국회제출) 추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등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월)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지주회사전환 유도,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 ②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인재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 10대 성장동력 산업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 '03~'07년간 R&D 총투자규모(40.1조원)는 지난 '80~'02년간 투자규모(39.7조원)를 넘어서는 수준
 - 대학교육, 직업능력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인재 양성 추진
- ③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덩어리 규제개선('04.8월 1기, '06.8월 2기),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서비스업 경쟁력강화 대책('04년~06년) 추진
- ④ 한·미간을 포함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 * 칠레('04.4월), 싱가포르('06.3월), EFTA('06.9월)와 FTA협정 既발효 ASEAN,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도 협상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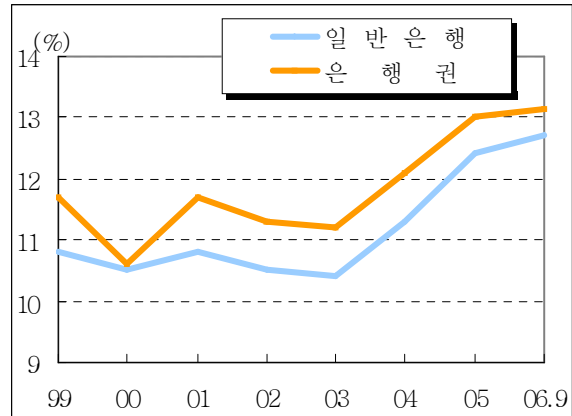
주요 성과

- ①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기업 수익성 추이



BIS 비율 추이(기말기준)



- ②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03년 평균 3.3년에서 '06년 2.1년으로 단축되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72.5%에서 85.6%수준으로 향상

-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 국제 특허출원건수 증가('05년 4,684건으로 세계 6위)

- ③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신용카드 가계 연체율도 크게 축소

*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만명) : ('04.4월)382.5 → ('06.11월)282

* 연체율(% , 1개월 이상) : ('03말) 14.1→ ('04말) 9.0→ ('05말) 5.9→ ('06말) 5.1

- ④ '04년 수출 2천억불 달성에 이어 '06년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 달성('03~'06년간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 612억불)

* 주요수출실적 달성연도 : 1백억불 ('77년) → 1천억불 ('95년) → 2천억불 ('04년) → 3천억불 ('06년)

3.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정책 방향

- ① 사회·복지지출은 소비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사회투자 확대
 -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긴급 복지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 강화
 -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직업훈련·고용지원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등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의 교육기회와 취업능력 제고
 -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 주택금융지원 확대
- ②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성장동력의 원천을 다원화
 - 행복·혁신·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노력
 - 특성화된 지역 발전전략을 도입하고, 도농 상생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③ 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시설 개선 및 경영 혁신 지원 등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 비정규직 입법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 개선 추진

주요 성과

- ① 참여정부 이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사회투자 확대 등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

< 기간별 재정규모 및 복지지출 증가율 비교(연평균, %) >

국민의정부('97~'02)		참여정부('03~'06)	
재정전체	복지분야	재정전체	복지분야('03~'05)
6.3	8.0	11.3	19.5

* 분야별 통합재정규모는 결산기준(건보, 고용보험 포함)으로 작성되어 복지는 '05 통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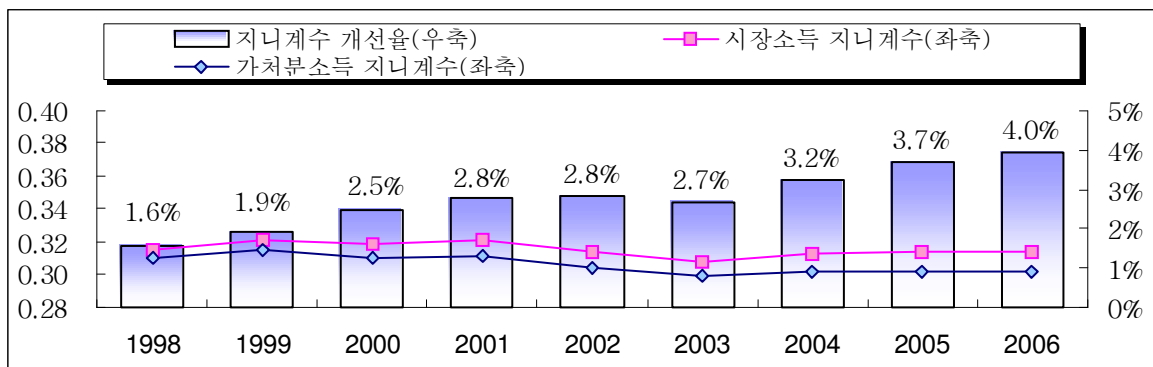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사회보험·보육지원 등 사회 안전망의 수혜자가 큰 폭 확대

(단위 : 1,000명)

	'98	'99	'00	'01	'02	'03	'04	'05	'06
기초생활수급자	979	933	1,489	1,420	1,351	1,374	1,425	1,515	1,535
국민연금수급자 (일시금 제외)	198	282	618	770	916	1,052	1,424	1,652	1,859
보육지원 아동	78	161	159	182	240	241	384	569	992

- ② 소득분배 악화추세를 완화시키는 조세·이전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점증

소득분배 개선효과(지니계수 기준)



* 통계청 가계수지 통계의 도시근로자 자료를 기초로 직접 산정

- ③ 국가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기반이 마련* 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효율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04.1),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05.3) 등

4. 미래에의 대비 강화

정책 방향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중장기적 시계 하에서 대비가 필요한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제시
 - 출산·양육 환경개선,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를 추진
 - 복지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효율화 노력 강화

주요 성과

- ①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수립·발표(06.8월)
 -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투자 강화로 동반성장 추진
 - 「인적자원활용 2+5전략」 등 부문별 후속계획을 통해 비전의 구체화 및 공론화 작업 진행
- ②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06.7월)
 - 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고령자 고용촉진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제고
- ③ 미래 재정위험 대비
 - 국가재정법 제정(06.10월 공포, 07.1월 시행)을 통해 재정의 운용효율성 및 중장기 대비 기능 강화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 *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06.12월 국회통과, '07.1월 시행),
 -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07.2월 기준)

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

1. 세계화·정보화 추세

- 세계화·정보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 시장이 통합되고, 1등 상품·서비스에 대한 쏠림현상 등으로 승자독식 시대 도래
 - 세계화의 진전으로 금융의 국제적 동조현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며, 기업은 무한경쟁에 직면
 - 지식 창출·활용 능력이 혁신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
- * 과학기술은 자본·노동과 달리 수확체증적으로 발전→ 국가·기업·개인간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가 확대될 우려

⇒ 상품·서비스 시장의 확대라는 기회와 함께 소득불평등, 산업·기업·계층간 혁신격차 확대 가능성 존재

- BRICs 국가(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가 큰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 * 세계경제에서 BRICs의 GDP 비중: ('05) 12→ ('20) 25→ ('30) 33% 수준 (05.12월, Goldman Sachs)
 -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경제규모는 '20년경 일본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BRICs 국가의 부상은 수출시장의 확대 기회와 함께 국내 투자 감소,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경쟁심화 가능성 제공

2.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05년)에 불과하여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

* 외국 사례 : 일본 1.29('04년), 프랑스 1.90('04년), 미국 2.05('04년) 등

○ 반면, 고령화는 OECD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 고령화 사회(65세이상 노령인구 비중 7%) 진입이후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중 14%) 진입에 불과 18년 소요 예상

· 외국 사례 :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등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함께 재정부담 급증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 위축 등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우려

* 1인당 실질 GDP는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0.08%p 증가, 노인 인구 1% 증가시 0.041%p 감소(IMF, 2004년)

○ 노인인구부양을 위한 미래세대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 노인부양비(% , 노인/생산가능인구) : (05년) 12.2→ (20년) 21.7→ (50년) 71.4

⇒ 저출산·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요청

3. 양극화 현상의 진전

- 경기 회복에 따른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 미흡
- 상류층 비중은 유지, 중산층이 위축되는 가운데 빈곤층 증가하여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상황이 다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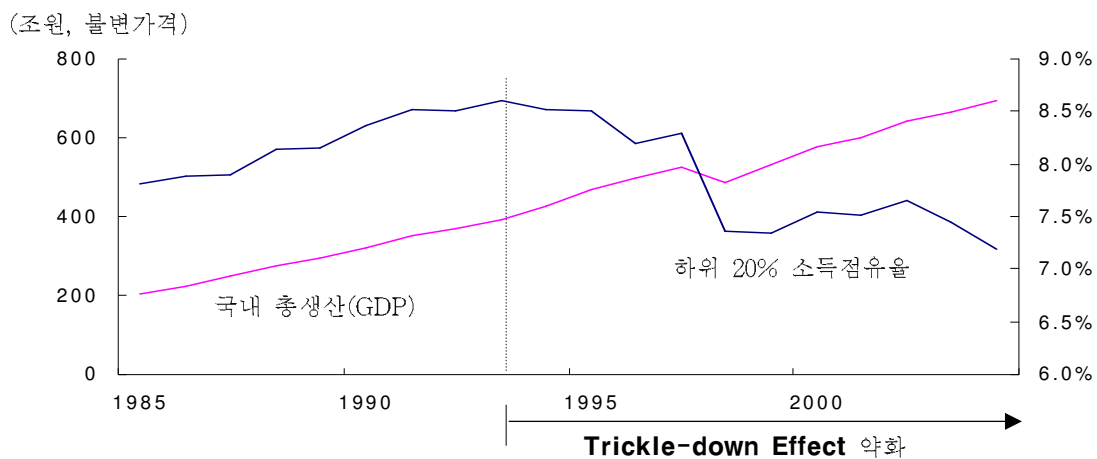
< 지니계수 추이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지니계수 (전국가구 기준)	0.341	0.344	0.348	0.351
소득 5분위 배율(%)	7.23	7.35	7.56	7.64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06년)

-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도 악화

* 고용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증가시 피고용자 증가)
: ('90) 26.8명 → ('95) 18.1명 → ('00) 12.4명



⇒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성장 저하로 귀착될 우려

Ⅲ. 향후 대응방향

- ◇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 완화 노력을 강화
- ◇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의 마무리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

1]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하고, 금융·부동산·외환 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56%수준 집행 목표) 등을 통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

⇒ 다음 정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를 물려줄 것

2]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

-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 공공·사회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
 -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평생교육 기반 마련 등을 함께 추진
- 분양가 상한제·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
- 서민금융 활성화·대부업 감독체계 조정·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유도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

- ③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중장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

[성장 잠재력 확충]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04~'08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6.12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08년 3만개 목표) 등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
-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6월 예정), 서비스 산업 중장기 로드맵(07.상반기) 등을 통해 보완·발전

[경제시스템 선진화]

-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07년 1단계 완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06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2단계 금융허브 로드맵 시행,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대안 마련, 노사관계 및 비정규직 관련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연계성을 확보

[미래 대비]

- 국민연금 개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04~'08년), 에너지 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05~'07년) 등의 착실한 마무리를 통해 미래에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2+5」 전략,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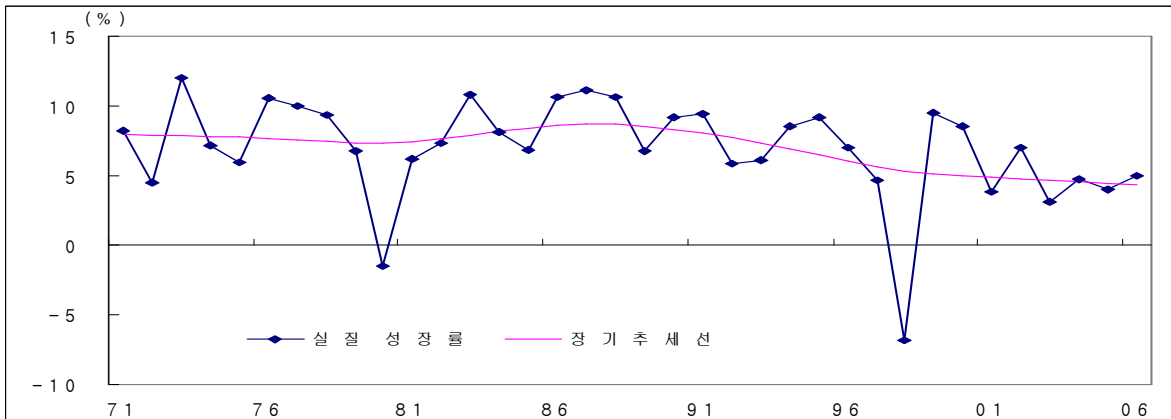
붙임

주요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성과

1. 경제성장

① (성장률) '03년 이후 3~4%대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던 우리 경제는 '05년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속도에 근접

<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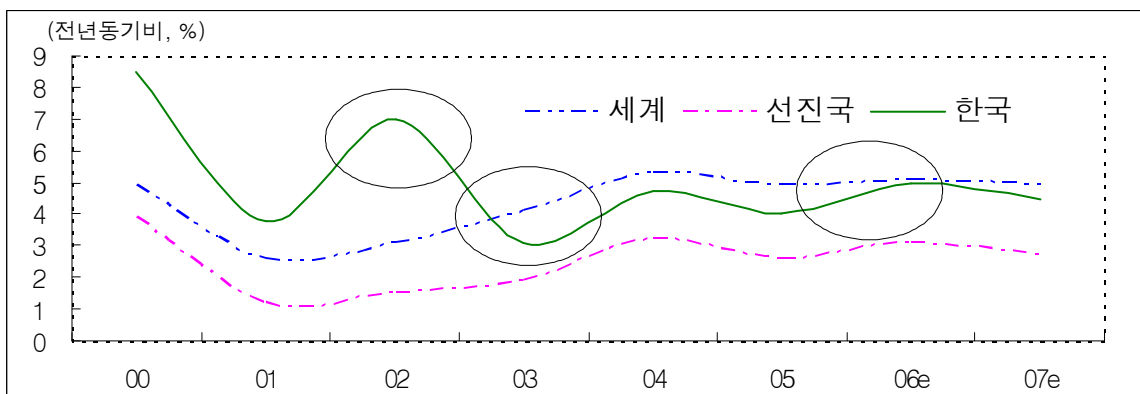


○ 출범초기의 낮은 성장세는 '01~'02년의 가계부채의 후유증으로 민간소비의 2년 연속 감소세 등 내수 위축에 주로 기인

- 이는 국내 경기가 세계경제 흐름과 반대반향으로 움직이게 된 주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기가 부진했던 2002년에는 과잉소비로 고성장을 나타냈으나, 세계경기가 호조를 나타낸 03~04년중에는 소비위축으로 국내경기 부진

< 연도별 성장률 추이 국제비교 >



○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외국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움

- 선진국의 국민소득 1만불→2만불 기간중 평균 실질성장률은 3.2% 수준(일본 3.6%, 미국 3%, 영국 2.1%, 프랑스 2.3% 등)

* '04년기준 국민소득 1.5만불 내외인 6개 국가의 최근 5년 평균성장률은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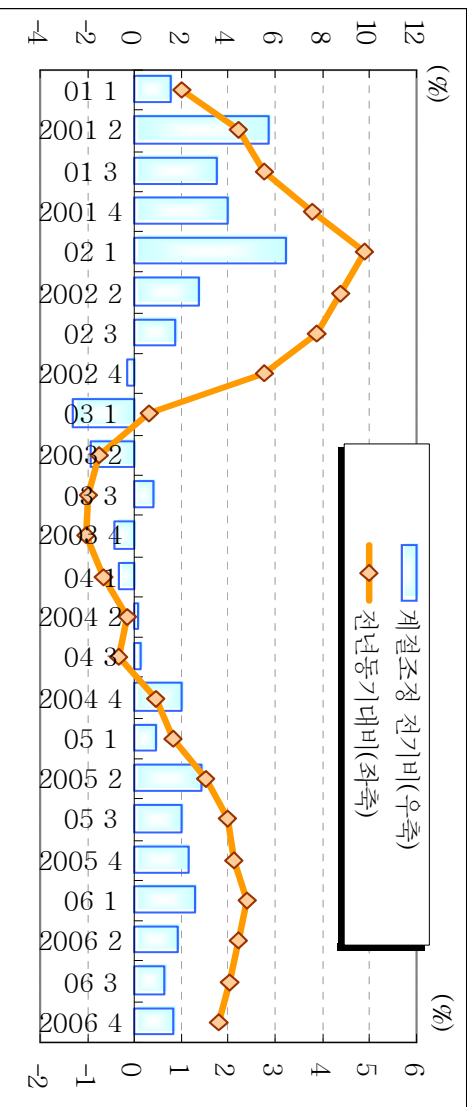
- 반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우리경제는 연평균 4.2% 성장세를 기록

< 주요국 연대별 경제성장률 추이(%) >

국 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미 국	4.4	3.3	3.1	3.1	2.8
캐나다	5.1	4.4	2.9	2.4	3.1
독 일	4.8	3.2	1.9	3.3	1.1
프랑스	5.7	3.7	2.2	1.7	2.1
이탈리아	5.7	3.8	2.4	1.5	1.4
일본	10.4	5.2	3.7	1.7	1.3
영 국	3.3	2.4	2.4	2.1	2.7
한국	7.7	8.6	7.6	6.1	4.5

□2 (민간소비) 2003~04년중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시험 (05년 3.2%, 06년 4.2%)

국민계정상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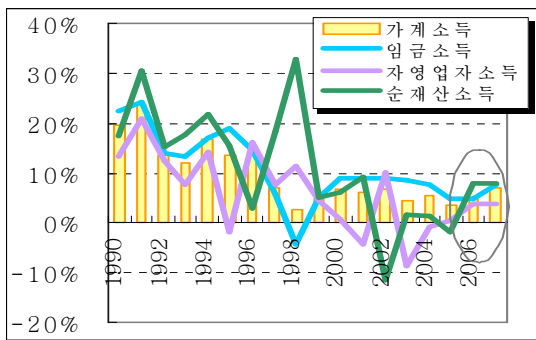
- 다만, '06년 2/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0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GNI(국민총소득) 부진이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고용 등 가계소득여건의 개선이 미흡해 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교역조건 악화의 민간소비 영향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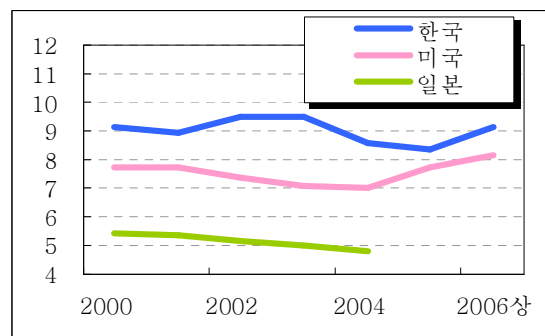
: 기업 수익성 악화 → 가계소득 둔화(임금 및 고용둔화) → 소비 둔화
 → 가격 인상 → ↑

- 금년도 가계소득여건은 '06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시장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등은 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가계소득 추이 및 전망



가계 지급이자/가처분소득



- '05년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06.9말 현재 558.8조원)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2001~02년 '차입 소비형' 가계부채 증가시와는 다른 측면

* 개인 금융자산/금융부채 : (2000말)2.42 → (2003말)1.94
 (*04부터는 新계열) (2004말)2.12 → (2006.6말)2.13

- 담보인정비율(LTV), 연체율 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외국에 비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높지 않음

* 2006.6월말 현재 은행권 평균 LTV 51.3%, 2006.10월말 현재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 1.1% (주택담보대출 0.9%)

* OECD 15개국 가계부채/GDP : 80% (우리나라도 80% 수준, 2005년)

③ (투자)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2004년 이후 부진한 모습을 지속

① '04년 이후 개선흐름을 나타냈던 설비투자는 '06년 하반기 이후에도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건설한 흐름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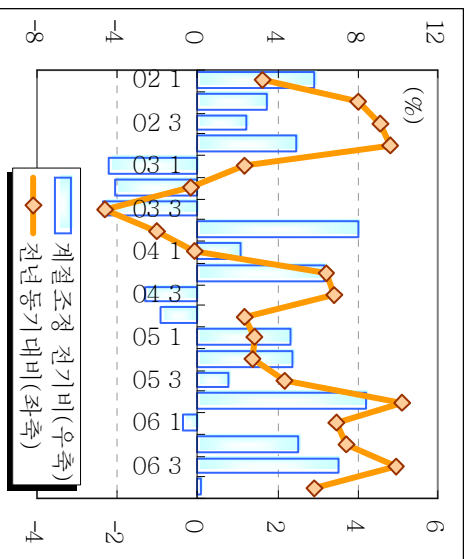
- 다만, '06년 2/4분기 이후 운수장비 회복세가 급격히 둔화된 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노후설비 改善 목적으로 투자가 확대된 것이어서 이들 투자주도 업종의 경기상황에 따라서 증가세 조정 가능성 상존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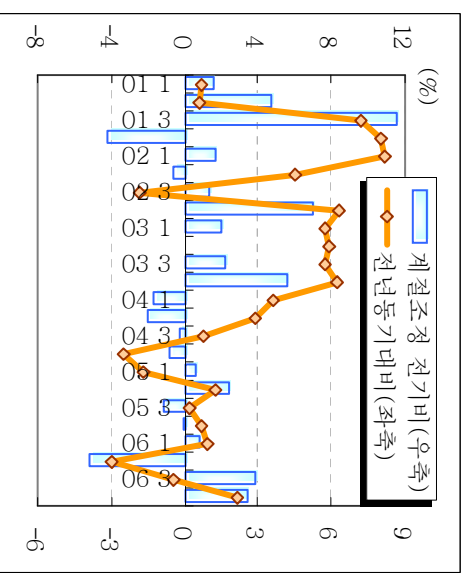
② 건설투자는 '04년 이후 건설경기 주기상 위축국면에 접어들면서 둔화되는 모습

- 이는 '00년대초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조정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대책에 따른 효과가 가세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설비투자 추이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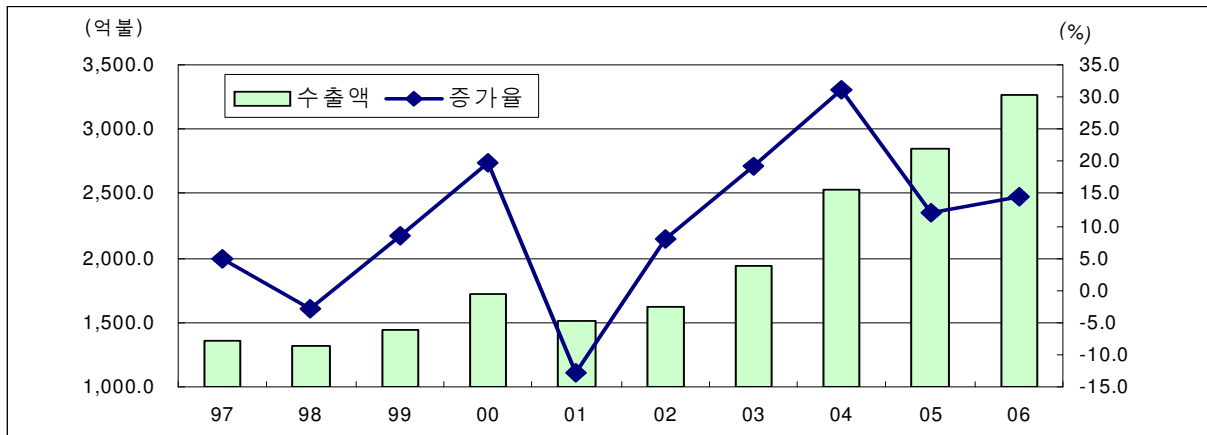


④ (수출 및 경상수지)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 4년간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간 600억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

①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과 중국경제의 고성장 등으로 대외 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2003~06년간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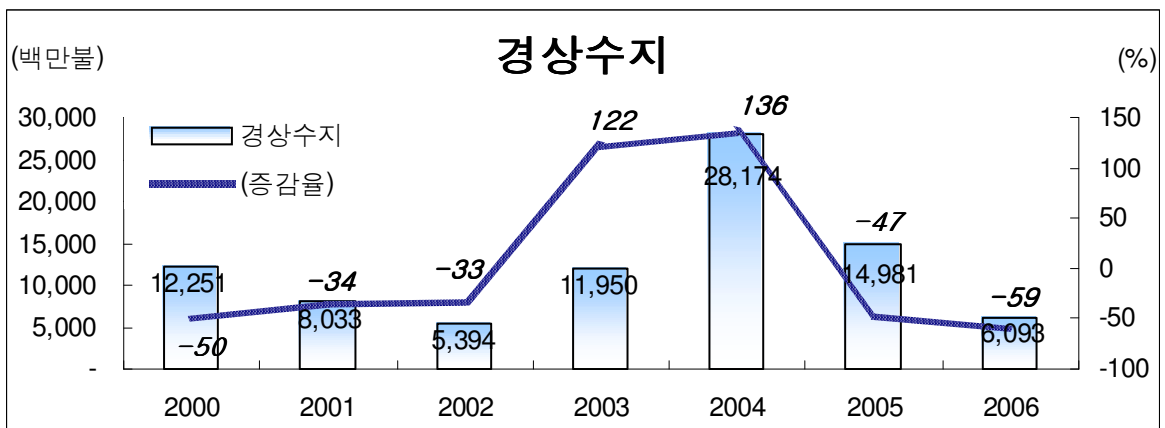
* '06년도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 달성 ('06년 3260억불)

수출 실적 및 증가율 추이



② 경상수지는 참여정부들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후의 흑자기조가 지속

- '05년 흑자규모가 150억불을 기록한 데 이어 '06년에도 61억불의 흑자를 시현 (07년에는 균형수준 전망)



2. 물가 및 부동산 시장

① (물가) 2003년 이후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소비자물가는 '03~'05년중 3.3% 증가하였으며, '06년 2.2%로 증가세가 둔화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년간 평균 2.5%, 06년 1.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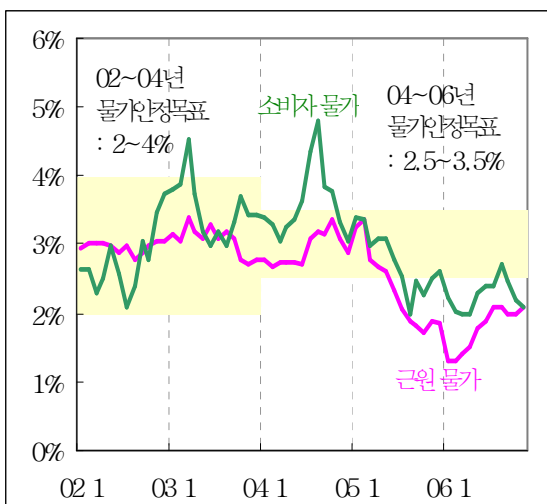
-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도 '06년 들어 3.1%대로 하락

* 생활물가(%) : (03년)4.0 → (04년)4.9 → (05년)4.1 → (06년)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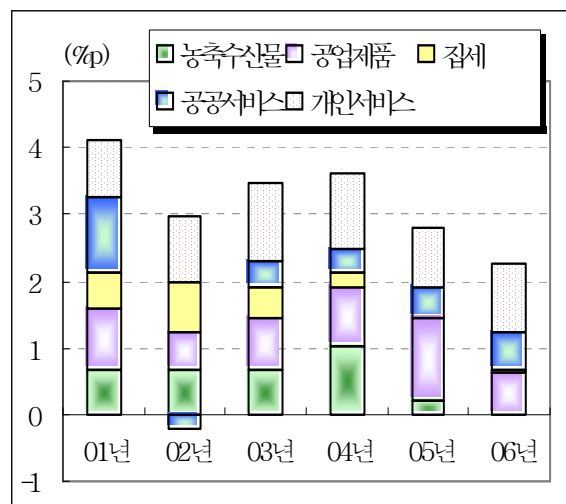
○ 최근의 물가안정세는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낮은 총수요 압력, 환율절상,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기인

* '06년중 Dubai 유가는 배럴당 평균 62\$로서 05년 평균(49\$/b) 대비 26.5% 상승하였으나, 국내 휘발유 가격은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3.5% 상승에 그침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추이



소비자물가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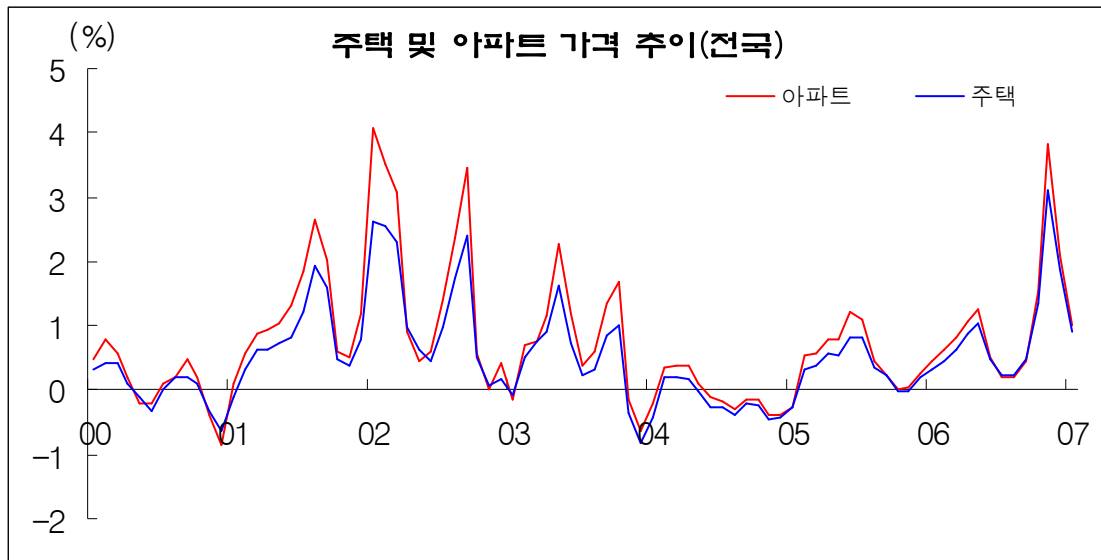


<註> 06년까지 물가안정목표 구간은 근원물가 기준임

② (부동산 시장) '03년 10.29정책, '05년 8.31정책, '06년 3.30보완정책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구축 등 부동산시장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질서 기반 마련
- 그러나 '05년 상반기 및 '06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심리가 재연

< 주택 및 아파트 가격 추이 (전월대비, %) >



-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공급물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주택공급제도 개편 등 '06년 11.15방안' 및 '07년 '1.11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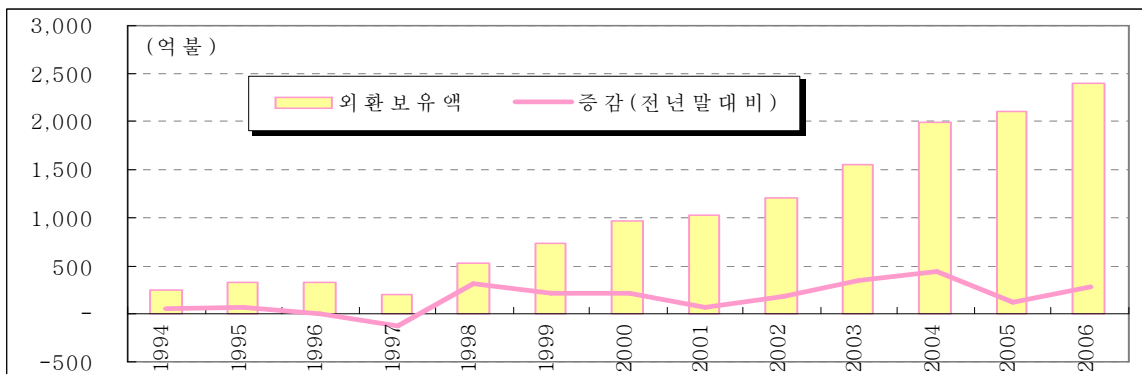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공급확대가 단기간내에 실현되기 어려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旣발표한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

3. 대외신인도 및 국가경쟁력

1 (외환보유액) '06년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89.6억불*로 참여정부 출범이후(02년말 1214.1억불) 외환보유액 약 2배 증가

* 중국(10,096억불, 06.10월), 일본(8,969억불), 러시아(2,834억불), 대만(2,651억불, 이상 06.11월)에 이어 세계 5위 수준



2 (대외신인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S&P社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 → A(05.7월)]로, Fitch社가 [A → A+(05.10월)]로 상향조정

○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구조조정 지속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

<S&P 신용등급 변화추이>

종전	'97.10.24	11.25	12.11	12.23	98.2.17	99.1.25	11.11	'01.11.13	'02.7.24	'05.7.27
AA-	A+ (1단계↓)	A- (2단계↓)	BBB- (3단계↓)	B+ (4단계↓)	BB+ (3단계↑)	BBB- (1단계↑)	BBB (1단계↑)	BBB+ (1단계↑)	A- (1단계↑)	A (1단계↑)

3 (국가경쟁력) '06년 IMD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38위로서 개선추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

구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경쟁력	29	37	35	29	38 (↓ 9)
(과학경쟁력)	12	16	19	15	12 (↑ 3)
(기술경쟁력)	17	27	8	2	6 (↓ 4)

※ 괄호안은 전년대비 순위변화

4. 국가 채무

① '05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GDP대비 30.7%인 248조원('06년 283.5조원 추정)

- 참여정부 출범('03년)이후 국가채무는 114.4조원 증가
('02말 133.6조원 → '03말 165.7조원 → '04말 203.1조원 → '05말 248조원)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지원(03~04년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25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 등 우리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

< 국가채무 증가 추이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e
국가채무(조원)	133.6	165.7	203.1	248.0	283.5
(GDP대비, %)	(19.5%)	(22.9%)	(26.1%)	(30.7%)	(33.4%)
· 중앙정부채무	126.6	158.8	196.1	238.8	275.9
· 지방정부채무	19.5	18.4	18.2	20.1	20.7

②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내용면에서도 양호

*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채무수준이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8.6%), 호주(15.3%), 뉴질랜드(26.0%), 아일랜드(29.9%) 등 4개국에 불과('05.12월 기준)

-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GDP대비 12.5% 수준인 100.9조원(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 147.1조원(18.2%))
- 국제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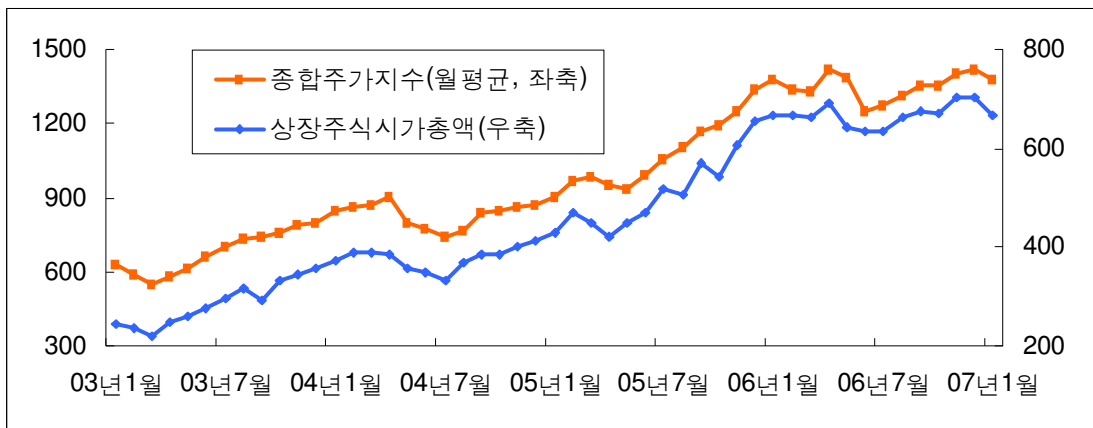
③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진행되는 '06년까지 증가하다가 '07년 이후 서서히 감소할 전망

* 국가채무/GDP 비율 전망 : '06년, 33.4% → '10년,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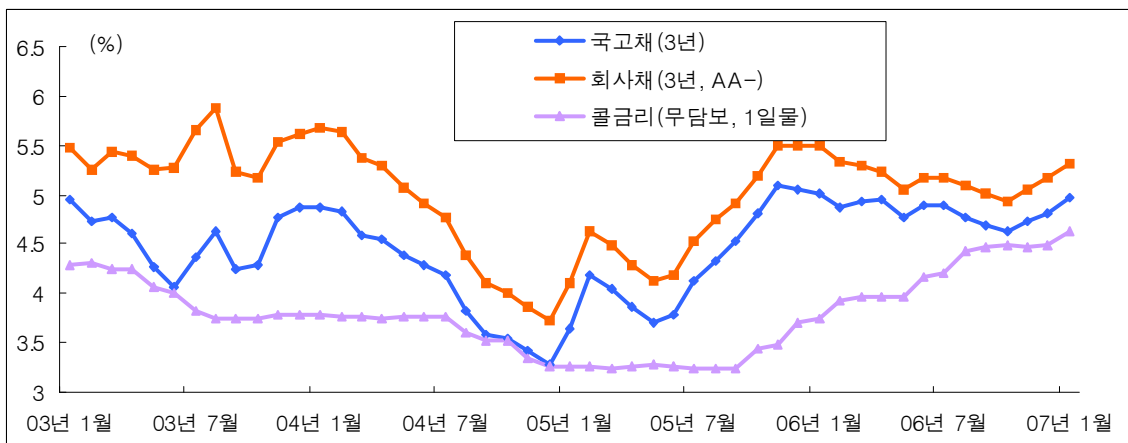
- 건전재정기조와 국가채무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5. 금융 시장

- ① (주식시장) 참여정부 출범전후('03년초)에는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카드채 위기 등으로 주가가 500p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 시장불안 해소, 경제체질 개선 등에 따라 '05년초 1,000p를 상회, '06년 2.22일 현재 1,465.4p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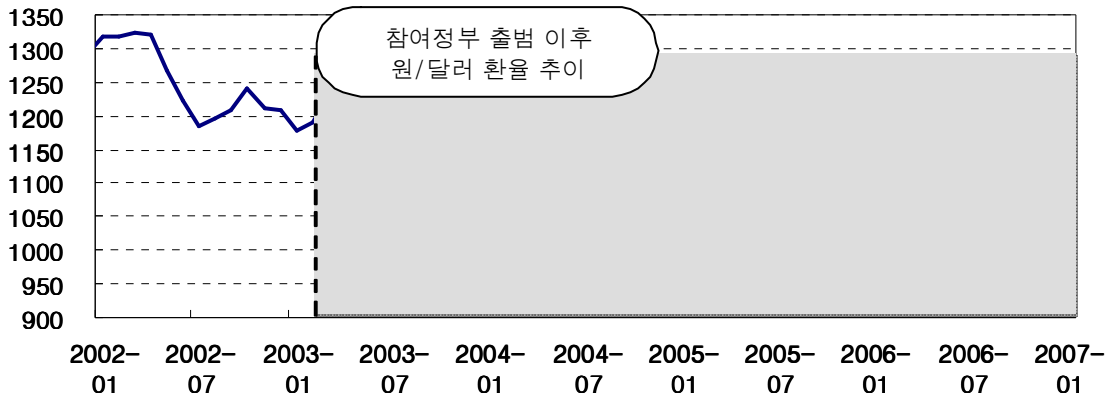


- ② (채권시장) 시장금리는 최근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다소 상승하였으나, '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지속
- '03년초 채권금리는 SK네트웍 문제, 카드채 문제 등으로 5~6%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 이후 시장 불안요인 해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 시현하였으나, 05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추세 등을 반영하여 다소 상승



3 (외환시장) 경제체질 강화를 반영하여 원화환율은 참여정부 출범前 1200원대에서 최근 940원 내외로 큰폭 절상

- 세계적 달러약세가 지속된 데다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참여정부 4년간 600억불 이상)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달러공급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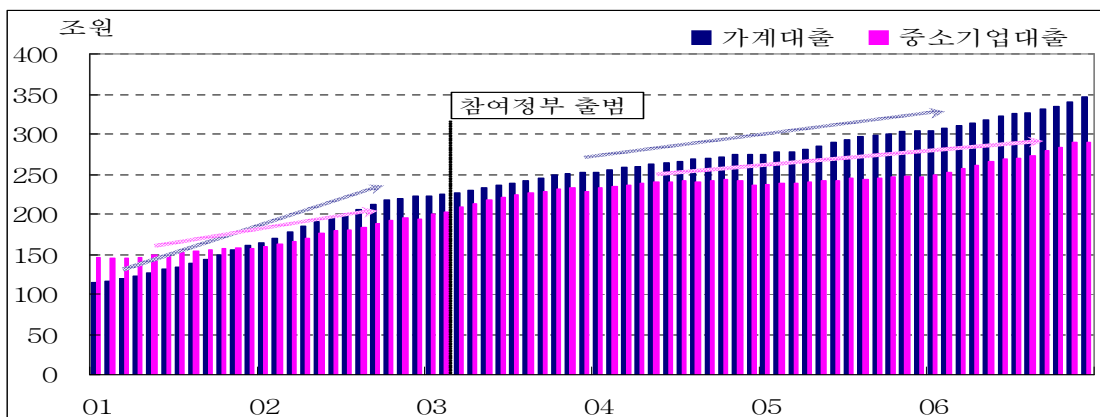
4 (대출시장)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 '00~'02년 연간 30% 이상 급증하여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를 야기했던 가계대출(03.2말 은행권 가계대출 224조)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로 전환

- 다만, 최근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및 면밀한 모니터링 추진중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 (02년)38.3% (03년)13.8% (04년)8.9% (05년)10.7% (06년)13.4%

- '03.2월말 200조였던 중소기업 대출은 '06.12월말 290조원으로 꾸준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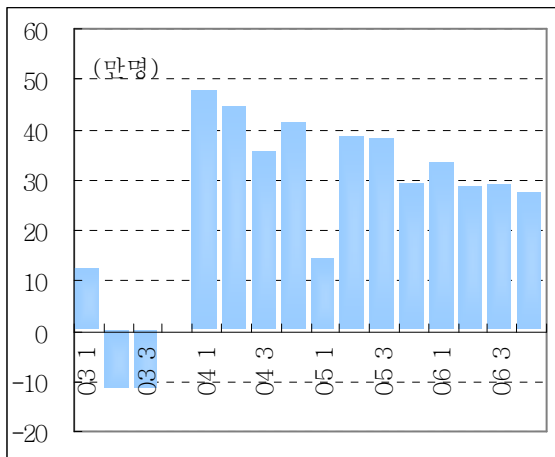
6. 고용 사정

1] 출범초기 다소 위축되었던 고용사정이 점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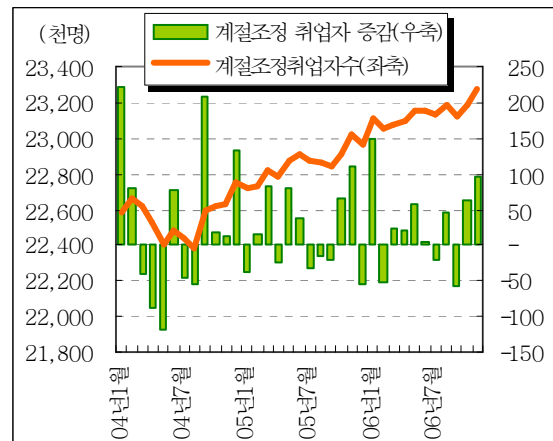
○ 참여정부 출범 첫째 감소되었던 일자리(취업자수 3만명 감소)는 04~06년중 33.8만개 증가하는 등 장기추세 수준으로 점차 회복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 (03)△3.0 →(04)41.8 →(05)29.9 → (06)29.5 → (07.1) 25.8

취업자 증가 추이(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 취업자수 추이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여성 경활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60%내외에서 등락

	01	02	03	04	05	06
고용률(%)	59.0	60.0	59.3	59.8	59.7	59.7
여성 경활참가율(%)	49.3	49.8	49.0	49.9	50.1	50.3
여성 경제활동인구(만명)	930	949	942	969	986	1,000

3]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2003~04년중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점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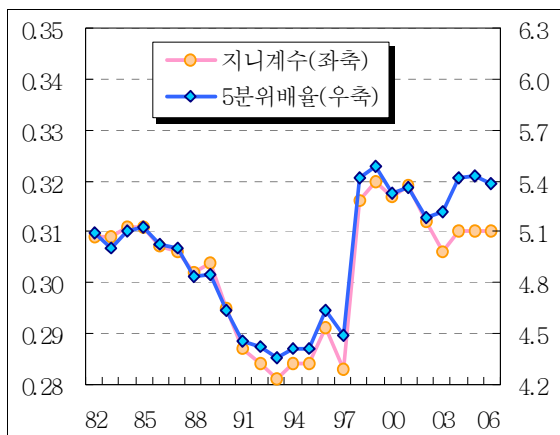
* 전체 취업자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 (02.8월) 17.07 → (03.8월) 20.8 → (04.8월) 24.1 → (05.8월) 24.0 → (06.8월) 23.6

7. 소득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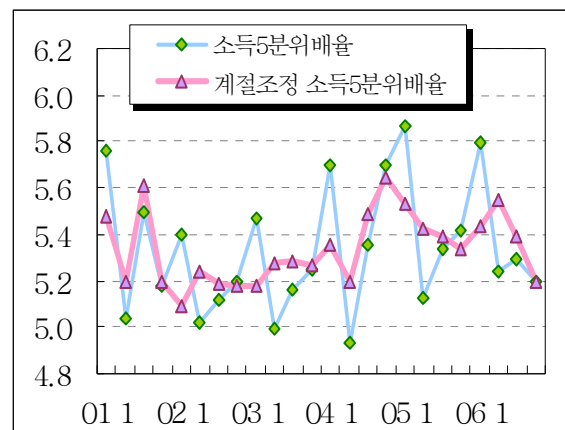
1] 2001~02년중 내수경기 호조속에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평균소득)이 2003년 이후 상승하는 등 소득 분배가 다소 악화

- 다만, 2005년 하반기 이후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모습

분배지표 추이



계절조정 소득5분위배율 추이



<註> 도시근로자 기준

○ 이러한 소득분배 추세는 경기적 요인이외에도 **경제양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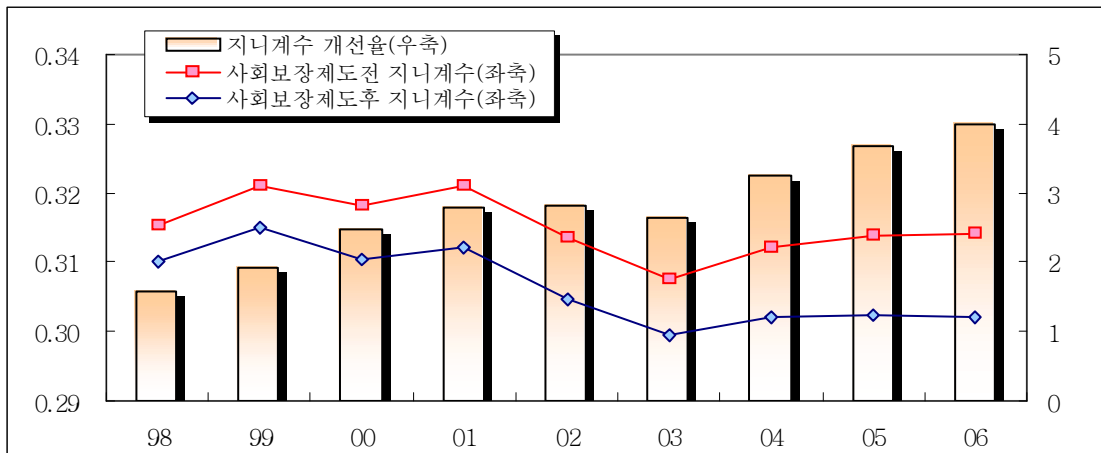
- 경제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실업 등 노동시장의 성과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 비중 상승('95년 5.9% → '05년 9.1%) 등 인구구조변화도 소득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

* 가구주 연령을 보면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소득(1분위) 가구주의 연령이 더욱 빠르게 증가

②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분배개선 효과는 증가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취약한 상황

- 참여정부 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악화를 다소 보완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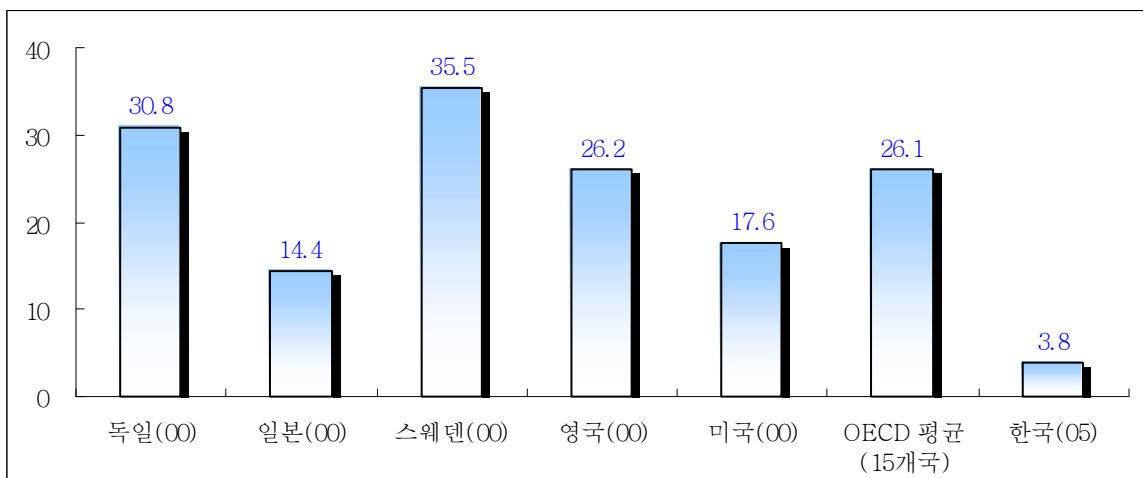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도시근로자 기준)

- 그러나,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보정 효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

OECD 국가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비교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전후의 지니계수 개선율(%)로 산정

* OECD는 OECD(2005) 자료, 한국은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참고〉 지난 4년간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①

	03년					04년					05년					06년 ^e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 국민소득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	3.8	2.2	2.3	4.1	3.1	5.4	5.7	4.7	3.3	4.7	2.7	3.3	4.5	5.2	4.0	6.1	5.3	4.8	4.0	5.0
(계절조정전기비)	Δ0.3	0.2	1.4	2.8	-	0.8	0.8	0.48	0.9	-	0.5	1.5	1.6	1.6	-	1.2	0.8	1.1	0.8	-
- 민간 소비	0.7	Δ1.5	Δ2.0	Δ2.0	Δ1.2	Δ1.3	Δ0.3	Δ0.7	0.9	Δ0.3	1.6	3.0	4.0	4.2	3.2	4.8	4.4	4.0	3.6	4.2
- 설비 투자	2.3	Δ0.4	Δ4.6	Δ2.0	Δ1.2	Δ0.1	6.4	6.8	2.4	3.8	2.9	2.7	4.3	10.2	5.1	6.9	7.4	9.9	5.8	7.5
- 건설 투자	7.7	7.9	7.7	8.3	7.9	4.9	3.8	1.0	Δ3.3	1.1	Δ2.2	1.6	0.3	0.9	0.4	1.2	Δ3.9	Δ0.6	2.9	Δ0.1
- 재화 수출	20.1	10.6	18.4	24.6	18.5	29.2	29.3	18.0	10.4	21.0	8.1	6.5	13.3	11.1	9.7	11.6	16.2	13.4	11.0	13.0
- 재화 수입	18.7	6.1	8.2	12.9	11.4	13.1	22.0	12.5	8.8	13.8	3.1	3.6	10.3	6.2	5.8	11.8	14.3	11.8	7.6	11.3
▪ 기여도 (내수)	3.0	Δ0.1	Δ0.6	Δ0.1	0.5	Δ0.6	2.5	1.5	3.0	1.7	1.4	2.9	3.4	2.4	2.5	5.3	3.6	3.6	2.9	3.8
(수출)	0.3	1.6	3.1	4.7	2.5	6.8	3.8	3.1	0.2	3.3	1.4	0.2	1.0	2.9	1.4	0.8	2.4	1.5	1.3	1.5
2. 고용 및 물가																				
▪ 취업자 증감(천명)	122	Δ120	Δ122	Δ1	Δ30	472	441	353	408	418	142	382	379	293	299	331	283	288	278	195
▪ 실업률 (%)	3.8	3.4	3.5	3.6	3.6	4.0	3.5	3.6	3.6	3.7	4.2	3.7	3.6	3.5	3.7	3.9	3.4	3.3	3.2	3.5
▪ 임금상승률(명목, %)	12.9	8.3	8.6	7.3	9.2	3.9	5.0	7.3	7.7	6.0	7.5	7.4	5.6	6.1	6.6	5.9	5.6	4.3	-	-
▪ 노사분규 (건)	28	96	166	30	320	18	319	96	29	462	23	50	174	40	287	19	30	66	23	138
- 근로손실일수 (천일)	71	198	882	147	1,299	68	341	660	130	1,199	66	95	530	156	848	83	113	916	89	1,200
▪ CPI 상승률 (%)	4.1	3.4	3.2	3.5	3.6	3.3	3.4	4.3	3.4	3.6	3.3	3.0	2.3	2.5	2.8	2.1	2.2	2.5	2.1	2.2
- 근원물가 상승률 (%)	3.2	3.2	3.1	2.7	3.1	2.8	2.7	3.2	3.2	2.9	3.1	2.5	1.9	1.8	2.3	1.3	1.7	2.1	2.1	1.8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달러)	Δ156	25.7	36.7	72.6	119.5	64.2	68.6	75.6	73.3	281.7	52.6	23.5	22.0	51.7	149.8	Δ11.2	6.9	3.7	61.4	60.9
- 상품 수지 (억달러)	12.0	56.9	67.9	82.4	219.5	85.6	100.6	97.5	91.7	375.7	87.5	83.7	72.3	83.3	326.8	52.2	74.1	62.3	103.5	292.1
▪ 자본수지 (억달러)	13.7	27.1	36.4	62.0	139.1	39.8	Δ60.7	Δ11.4	108.2	76.0	41.4	22.6	Δ5.0	Δ11.4	47.6	65.2	36.8	47.7	36.4	186.2
▪ 외환보유액 (억달러)	1,238	1,367	1,415	1,554	-	1,636	1,670	1,744	1,991	-	2,055	2,050	2,067	2,104	-	2,173	2,244	2,282	2,390	-
▪ 외국인 투자 (억달러)	11.1	15.5	19.7	18.4	64.7	30.5	20.1	33.7	43.6	127.9	31.3	15.1	30.5	38.7	115.6	22.1	27.1	26.0	37.1	112.3
▪ 대외채무 (억달러)	1,492	1,557	1,571	1,576	-	1,660	1,643	1,624	1,723	-	1,801	1,846	1,871	1,898	-	2,037	2,301	2,494	-	-
▪ 환율(원/달러, 시장평균)	1,201	1,210	1,176	1,181	1,191	1,172	1,161	1,155	1,093	1,144	1,022	1,008	1,029	1,037	1,024	977	950	955	938	955

<참고> 지난 4년간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②

	03년					04년					05년					06년 ^e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 금융 시장																				
▪ 회사채 유통수익률(3년, %)	5.39	5.31	5.59	5.44	5.43	5.56	5.09	4.42	3.87	4.73	4.41	4.19	4.73	5.40	4.68	5.38	5.15	5.11	5.05	5.17
▪ 콜금리(무담보 1일물, %)	4.27	4.11	3.77	3.77	3.98	3.77	3.76	3.63	3.38	3.62	3.26	3.27	3.25	3.54	3.32	3.88	4.03	4.37	4.48	4.18
▪ 주가지수 (기말)	535.7	669.9	697.5	810.7	-	880.5	785.8	835.1	895.9	-	965.7	1,008.2	1,221.0	1,379.4	-	1,359.6	1,256.2	1,371.4	1,434.5	-
5. 소득분배 및 복지																				
▪ 5분위 배율 (도시근로자)	5.47	5.00	5.16	5.25	5.22	5.70	4.93	5.35	5.69	5.41	5.87	5.13	5.34	5.42	5.43	5.80	5.24	5.29	5.22	5.38
- 지니계수	-	-	-	-	0.306	-	-	-	-	0.310	-	-	-	-	0.310	-	-	-	-	0.310
▪ 사회안전망																				
- 사회복지지출/재정지출 비율	-	-	-	-	20.2	-	-	-	-	23.4	-	-	-	-	25.3	-	-	-	-	25.2
- 기초생활수급자수 (천명)	-	-	-	-	1,374	-	-	-	-	1,452	-	-	-	-	1,515	-	-	-	-	1,535
6. 국가신용등급 및 경쟁력																				
▪ 국가신용등급 ¹⁾																				
- S&P	A-	A-	A-	A-	-	A-	A-	A-	A-	-	A-	A-	A	A	-	A	A	A	A	-
- 피치	A	A	A	A	-	A	A	A	A	-	A	A	A	A+	-	A+	A+	A+	A+	-
- 무디스	A3	A3	A3	A3	-	A3	A3	A3	A3	-	A3	A3	A3	A3	-	A3	A3	A3	A3	-
▪ 국가 경쟁력 (순위)																				
- IMD (대상국 : 60)	-	-	-	-	37	-	-	-	-	35	-	-	-	-	29	-	-	-	-	38
- WEF (대상국 : 117)	-	-	-	-	18	-	-	-	-	29	-	-	-	-	17	-	-	-	-	24
7. 국민생활																				
▪ 은행권 가계대출 (조원)	-	-	-	-	252.9	-	-	-	-	275.4	279.2	290.6	299.5	305.5	-	310.5	323.0	331.6	-	-
- 연체율 (%)	-	-	-	-	1.8	-	-	-	-	1.7	1.8	1.5	1.4	1.1	-	1.2	1.0	0.9	0.7	-
▪ 주택가격상승률 (전년동기비)	-	-	-	-	5.7	-	-	-	-	△2.1	-	-	-	-	4.0	-	-	-	-	11.6
- 아파트 (전년동기비, %)	-	-	-	-	9.6	-	-	-	-	△0.6	-	-	-	-	5.9	-	-	-	-	13.8
▪ 주택 보급률 (%)	-	-	-	-	101.2	-	-	-	-	102.2	-	-	-	-	105.9	-	-	-	-	-
- 국민임대주택 건설(천호)	-	-	-	-	71.8	-	-	-	-	91.4	-	-	-	-	96.2	-	-	-	-	96.8
▪ 인터넷 이용률 (%)	-	-	-	-	65.5	-	-	-	-	70.2	-	-	-	-	72.8	-	-	-	-	74.8
- 전자상거래 규모 (조원)	-	-	-	-	235	-	-	-	-	314	-	-	-	-	358	90	96	105	-	-

1)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된 시점이 속한 기간(연/분기)은 조정된 신용등급을 표시 (예) 2005.7.27일 S&P 신용등급 「A- → A」 로 조정 : 2005.3분기 A 로 표시